

전남광주·전북·충남 손잡고 스마트농업 혁신 실증

중기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추진

농업 신산업 육성 기대…이달 말 최종 의결

경북·부산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도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 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추진되면서 지역 농업과 첨단 제조 기술을 결합한 미래 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제26차 규제자유

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안전과 규제자유특구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개별 지역·단일 기술 중심의 특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연관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제도다.

지역별 강점을 연결해 대규모 실증과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총 2개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 과제가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전남광주와 전북,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 농업 광역연계형 특구’가 포함됐다.

스마트 농업 특구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 기술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주요 실증 과제로 한다.

각 지역이 보유한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개별 실증을 진행한 뒤 전남광주 지역에서 기술을 연계해 통합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 농기계와 자율주행 기술은 탄소 저감과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히면서, 향후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농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혁신방안에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실증 결과의 법령 정비 연계를 위한 규제부처 협력 강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특례 제도 개선 △지역주력산업 및 창업

정책과 연계한 특구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전남광주 스마트 농업 특구가 최종 지정될 경우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기 농기계, 자율주행 농업기술 등 미래 농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경북과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선박 자율 운항과 해상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시험한다.

경북은 자율운항,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검증한 뒤

양 지역의 통합 실증을 거쳐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왔다”며 “광역연계형 특구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안건은 오는 8월 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공정위, 하반기 ‘민생경제 교란행위’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하반기 민생과 밀접한 담합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플랫폼 시장과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문제 개선에 나선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5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화학제품과 페인트, 석유제품 등 공급망 위기와 연관된 산업의 담합 여

부를 집중 점검하고,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등 민생 침해 행위로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높인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제한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으로 경쟁 질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자본매각과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도 검토한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하도급 업체와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한다. 가맹점주 역시 단체협의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도급과 유통 분야의 고질적인 갑질 행위로 집중 점검한다. 조선·플랜트·전력 등 국가기간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엄정 제재한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납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행위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50%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최대일 거래는 최대 60일, 특약 매입 등은 4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줄여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회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배달앱과 오픈마켓, 앱마켓 사업자의 최

담합·배달앱·하도급 불공정거래 전방위 감시
대기업 계열사 몰아주기·편법 승계 집중 점검

대매우 요구와 끼워팔기,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소비자 기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

AI 산업 성장에 따른 경쟁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공정위는 챗GPT 등 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과 거래 구조를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AI 유료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 등 소비자 피해 요인도 점검한다. 위해제품 유통 감시 대상 플랫폼은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해 디지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식품·물류·의약품 등 민생 밀접 분야와 건물관리, 건설자재 조달 등에서 계열사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총수 2대 회사에 대한 사업 기회 제공이나 무상 신용보강 등 편법 승계 행위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화사를 누락하는 경우 총수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누락 계열사의 자산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조사 역량 확대에도 나선다. 올해 3월 시행한 167명 규모의 1차 인력 증원에 이어 10월에는 237명 규모의 추가 증원을 추진해 담합과 독과점 사건, 복합적인 공정거래 이슈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경제와 밀접한 불공정행위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디지털 시장과 대기업집단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경제주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美 혼풍에 코스피 6500 회복
삼전 2.5%·닉스 5.8% 상승

미국발 반도체 혼풍에 힘입어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등하며 65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도 나흘 연속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239.31p(3.76%) 오른 6598.26으로 거래를 마쳤다. 6603.48로 출발한 지수는 한때 6674.66(4.96% ↑)까지 치솟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 45번째 코스피 사이드카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50%와 5.77% 상승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홀로 1조 4514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 1854억원과 2802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 수급에서는 사모(5194억원) 순매도가 두드러졌고, 금융투자(1379억원)과 투신(1101억원) 등은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반도체주 강세 속에 동반 상승한 분위기가 국내로까지 이어졌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각각 1.71%, 1.79%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도 2.59% 뛰었다.

국제유가가 급락한데 팔라티어 등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이 깜짝 호실적을 내놓으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SK하이닉스미국주식에따cker서(ADR)는 8.17% 오른 154.38달러로 장을 마쳤다. ADR 한 주가 한국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는 전년 SK하이닉스 총가(157만7000원·약 1106달러)보다 40% 가까이 높은 가격이다.

아울러 SK스퀘어(5.57%), 삼성전기(14.43%), 현대차(3.06%) 등을 포함해 시총 상위 1위부터 32위까지 모두 올랐다.

반면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에 SK이노베이션(-1.89%), S-Oil(-2.62%) 등 정유주는 하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915개 종목 중 74%에 해당하는 675개 종목이 올랐다. 197개 종목이 내렸으며, 43개 종목은 보합세였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기술(12.85%), 건설(6.16%), 전기전자(4.47%) 등이 올랐으며 음식료·담배(-0.19%), 오락·문화(-0.69%) 등은 내렸다.

코스닥은 지난달 31일 11.63% 폭등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장 중 한때 800선을 회복했다가 전장보다 18.87p(2.42%) 오른 799.59로 장을 마쳤다. 4거래일간 상승률은 24%에 달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하계 교사 금융·경제 연수

교사 80여명 참여…금융경제·연금자산 운용 등 교육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4일 전남광주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2026년 하계 교사 금융·경제연수’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옛 광주시교육청(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이 2024년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역 초·중·고 교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연수에서는 중앙은행의 역사와 역할을 비롯해 금융·경제의 이해, 연금 자산 운용과 재무설계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 교사들은 청소년 경제교육에 적극

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경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으며, 이 같은 연수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했다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전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연수가 교사들의 금융·경제 교육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광명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 이해와 경제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신보, 현대차그룹·은행권과 상생금융 협약

자동차부품사 참여 3000억원 규모 수출프로젝트 보증

신용보증기금은 현대차·기아·8개 은행과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총 8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농협·우리·하나·중소기업은행이 각각 20억원, 신한은행 10억원, iBM뱅크·경남은행이 각각 6억원, 4억원 등 총 200억원을 출연한다.

이들 재원으로 신보는 현대차그룹의 수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2~3차 협력사에 총 3000억원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에 보증

비율 100%, 고정보증료율 0.8%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협약은행의 보증료 지원을 통해 1차 연도에는 보증료 전액, 2~3차 연도에는 0.3%p를 감면해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자동차 부품사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보는 대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



빛고를농업대학, 전문농업인 38명 배출 전남광주통합특활시 농업기술센터는 5일 스마트농업교육관에서 ‘제19기 빛고를농업대학 졸업식’을 열었다.

전남광주특별시, 농식품 지원사업 문턱 낮췄다

재산권 제한 완화…실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 농식품 가공업체의 오랜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이뤘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 제도 개선안’이 최근 열린 2026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개선은 단순한 지침 변경을 넘어 담당 부서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 안전으로 상정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지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적극행정위에 직접 안전을 제출해 심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한 사례로, 적극행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은 사업 부지나 건물에 근접당 두 재산권 제한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시설 투자 등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는 영세·중소 가공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재산권 제한이 없는 일부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지속되면서 현

장의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전남광주특별시 농식품유통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기업과 관련협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적극행정 안전을 마련, 적극행정위 심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시·군·특화지원사업 등 6개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 지침을 전면 개정한다. 앞으로는 담보 제공 등 재산권 제한이 있더라도 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면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